

전기차와 충전기의 화재 예방·대응 이행력 높인다...소통 강화

-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협의체’ 발족, 화재 예방형 충전기 보급 및 보조금 지원 방안 논의
-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사회단체 전문가 29명으로 구성, 4개 전문분과 운영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6일 오후 서울스퀘어 회의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한다.

이번 협의체(위원장 민경덕 서울대 교수)는 올해 6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구축 확대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민간단체, 산업계 등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정책·제도,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등 4개 전문분과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확대 및 안전 강화 방안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정책·제도 분과에서는 전기차 및 충전기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등 법·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한다. 전기차 분과와 배터리 분과에서는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출시·관리를 위해 화재 예방 기능을 추가하거나 배터리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충전기 분과에서는 화재 예방·대응 기능이 장착되거나,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기능 등이 있는 충전기에 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충전기의 기능과 지원 방식 등을 논의한다.

* 2024년도 예산 정부안에 화재예방 미래형 충전기 사업으로 800억원 예산 신설 편성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2030년 전기차 420만대와 충전기 123만기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처럼 이번 협의체와 함께 안전한 충전 기반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협의체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담당자	수석전문관	김경미 (044-201-6897)



□ 추진 배경

- 협의회 구축 배경 공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의 이행력을 높이기 협의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함
- ※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 관련 현안 과제, 규제개선 사항, 연구 주제, 해결방안 등

□ 개 요

- (時・所) '23. 9. 6(수) 14:00~16:00, 서울스퀘어 중회의실2(서울역 근처)
- (참 석) 환경부, 협의회 위원, 환경공단, 자동차환경협회 등 50여명
- 발표 및 논의 안건
 - 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 협의회 운영계획
 - ② 전기자동차의 이해(왜 전기차인가 등)
 - ③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충전기 역할 및 기능 등

□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05	5분	· 참석자 소개	
14:05~14:10	5분	· 인사 말씀	환경부
14:10~14:20	10분	·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	환경부
14:20~14:25	5분	· 협의회 위원 위촉 및 운영계획 발표	환경부
14:25~14:45	20분	· 전기자동차 이해(왜 전기차인가 등)	홍기철(현대자동차 상무)
14:45~15:05	20분	· 화재 대응을 위한 충전기 역할 및 기능	최영석(차지인 대표)
15:05~15:50	45분	· 전체 토의(분과별 활동계획과 성과물 등)	전체
15:50~16:00	10분	· 정리 및 폐회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과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